

---

**11월 3-4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2015.11.20.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 차례

### 1. 정부행정 (정미나) | 1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놓고 불필요한 갈등 고조.. 청년문제 불모로 영역 싸움 중

### 2. 과학기술 (고광용) | 4

미래창조과학부, R&D 부정비리신고센터 유명무실... 접근성·홍보 강화 절실

###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협의, 중국-대만 정상회담 후 최초 만남, 그리고 남북관계

### 4. 정치 (박철한) | 11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여진 계속

### 5. 여론동향 (심은정) | 14

I 해외 -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II 국내 - 테러 우려 집단으로는 북한보다 '이슬람국가'(IS)를 더 많이 지목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편집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mailto:0225jsk@hanmail.net)
- ❖ 문의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mailto: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mailto:gaea123@naver.com)

# 1. 정부행정

## ○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놓고 불필요한 갈등 고조..청년문제 불모로 영역 싸움 중

- 서울시는 지난 11월 5일 '청년활동 지원사업', 이른바 '청년 수당' 제도를 도입키로 발표함. 이는 만 19세~29세 청년들 중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3000명을 선발해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만 19세~29세 청년들은 약 19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3000명을 선발하고 향후 점차 늘려갈 예정.
-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를 근거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제 도입은 복지부와 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동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함.
- 이에 서울시는 본 사업은 일자리 사업임을 강조. 즉, 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 따라서 본 갈등에서 핵심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지의 여부임. 실제로 사회보장 기본법 3조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사업'은 그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무려 5천 892개나 지정하고, 지자체에게 유사·중복사업의 수정 및 폐지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들은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음.
- 물론,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제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인지 일자리 정책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것은 서로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음.

- 하지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음. 무엇보다 청년수당 정책은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느슨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바탕으로 현금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 골자. 이런 측면에서 청년수당 정책은 실업부조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것이 사실.
- 이런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책과 중복된다”며, “지금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115만 명인데 지자체에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협력을 하라”고 비판.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직업훈련기간에 참여할 경우 40만 원 정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의회가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토론을 제의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원순 시장에게 “황당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자체든 중앙정부는 정부전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정작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울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 ☞ 당의 입장 및 대응

- 서울시-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적 영역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청년 사업과 목표 및 성격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 특히,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연계 사업이 질 좋은 일자리와 연계되지 못하고 청년층들의 참여 또한 제

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책방안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

-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청년 실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느냐가 핵심. 중앙정부가 못한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제도에 대한 큰 구상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좋은 제도’의 도입 자체를 막아버릴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에 임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켜 청년실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
- 무엇보다, 정의당은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실업이 질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주장할 것임.

## 2. 과학기술

### ○ 미래창조과학부, R&D 부정비리신고센터 유명무실... 접근성·홍보 강화 절실

#### ▶ 미창부, R&D 부정비리신고센터 신설 배경... 산하 연구기관 비리 속출

- 지난 2014년 8월, 산하 연구기관에서 비리가 속출하자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R&D 부정비리 척결 대책으로, 연구개발비 부당사용 기관에 최대 5배 가산금 부과 및 10년 간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와 연구비 중 문제가 심한 인건비에 대한 지출현황 점검 등 특정감사 매 분기별 시행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음.
- 특히, 미창부 감사관실 내 특별감찰TF를 꾸리고 R&D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감찰할 계획이라 밝혔음. 또한, 연구비 배분·평가 권한이 집중된 R&D관리 전문 기관에 대해 과제책임자(PM)와 소속 직원 간 특혜성 계약 여부를 점검함.
- 이러한 R&D 부정비리 신고센터 건립의 계기는 몇 개의 산하기관 비리가 속출했기 때문인 데 다음과 같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폐이퍼컴퍼니를 동원하여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해당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 후 1주일 만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들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적발되었음. 지질자원연구원은 위탁연구사업 공모 전 사업자 사전선정 뒤 과제연구에 들어가 문제가 됐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임직원 38명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법인카드로 4,200여 만원 가량을 유홍비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 예산배분 및 집행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미창부 사무관이 산하기관 연구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혐의가 적발되어 크게 문제가 되었음.

#### ▶ 미창부, 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폐쇄 등 접근성·인지도 낮아 유명무실

- R&D 부정비리신고센터는 '대형 국가 R&D 연구비 유용행위, 특정분야 소수 전문가가 사업 기획·집행·평가 등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부정·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위해 설치되었음. 온라인 신고는 미창부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는 과천청사에서 진행

가능 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고서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신고가능 함. 신고 요건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센터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문제로 유명무실한 상황임.

- 우선, 접근성이 대단히 낮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R&D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치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며 링크·안내도 없음. 다만, 미창부가 따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으며, 신고접수 절차는 미창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탭, 'R&D 부정비리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이러한 절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둘째, 대학 산학협력단과 출연기관의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동시에 대학·출연기관 연구자들이 R&D 수행 시, 센터에 대한 홍보를 거의 하고 있지 않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대단히 낮은 상황임.
- 셋째, 신고과정 상 신고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의무사항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적어야 됨. 일부 신고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으나, 이미 미창부와 피신고자인 산하기관 종사자 간 관계가 드러난 비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얼마든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여전하기에 신고하는 부담이 대단히 큰 상황임.
- 넷째, 증거서류를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익신고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신고자는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었는데, 명확한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증빙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
- 다섯째, 피신고자를 특정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신고대상이 개인뿐 아니라, 부서 단위나, 부정비리가 기관장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벌어질 수 있음

## ☞ 당의 입장 및 대응

- 기본적으로 감사는 크게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나뉨. 내부감사는 자체감사로써 부처 내부에 감사관실 및 부정비리신고센터와 같은 상시 감사조직을 만드는 것임. 미

창부 외부감사는 일반적으로 국정원 감사와 국회감사가 있음. 특히, 내부감사의 경우, 지난 비리사건에서 보듯 부처와 산하기관 간 밀착된 관계가 조성되어 있기에, 성역 없는 감사가 쉽지 않음. 즉, 부정비리신고센터와 같은 특별감찰 TF를 통한 자체감사는 장관리더십이 강하게 작동하더라도 상당한 한계를 가짐. 그러므로 이 센터의 유명무실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

- 특별감찰TF를 만든 것은 장관입장에서 자체감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과시성 조직 신설 일뿐, 사실 기존의 감사관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임. 아울러 이 특별감찰TF 조직의 내부구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고, 장관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감찰담당관들의 신상이 공개돼 그들을 통한 로비가 우려되므로 비공개로 해야 할 것임. 다만, 성역 없이 신고를 접수 및 집행할 수 있는 관료조직 내 인력뿐 아니라 외부 민간전문가 등 감찰조직 구성과정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관여해야 함. 또한 감사조직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법적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의 연계가 요구됨.
- 유명무실화 된, ‘R&D 부정비리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개선이 추가로 요구됨. 우선, 센터 홈페이지를 재개설하고, 신고접수 절차를 홈페이지 배너로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과학기술 출연기관 홈페이지에도 부정비리 신고 배너를 달아야 함.
- 둘째, 대학별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에 적극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동시에 대학 및 출연기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교수·대학원생 연구진들에게, 출연기관의 자체감사실 및 연구책임자는 기본·용역과제 연구진들에게 의무적으로 센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게 해야 함.
- 셋째, 신고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절차의 폐지여부를 논의해야함. 혹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익명의 신고도 접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단, 비리사건의 정확한 확인·통화를 위해 연락처는 요구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증거서류를 기본적으로 요하되, 증빙물 제출이 어려울 때, 비리 사건에 대한 목격내용·정황을 자세히 적는 것으로 증거서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함.
- 다섯째, 피신고자를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및 기관(장)까지 확장하여 신고할 수 있게 신고서 양식의 수정 등 접수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 3.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협의 중,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합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안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도 18일자 평양발 기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 관계자로부터 반 총장이 23일에 나흘 일정으로 방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함.
-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협회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함. 다만 11월말까지는 반 총장의 일정이 딱 차 있다는 것도 공개함으로써 그때까지는 방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함.
- 반기문 총장 방북이 성사된다면 1979년 쿠르트 발트하임, 1993년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에 이어 역대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3번째 방북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유엔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둘 이유도 없지만, 유엔과 북한의 관계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음. 북한의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유엔이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결의를 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11년째 유엔총회 3위 원회 등에서 통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임. 반 총장의 방북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대선과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교체 등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 때문임.
- 한편,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정부 당국은 수차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북한 측은 남한 당국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었으나 일정한 돌파구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북한은 내년 5월에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해나가려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 중국-대만 정상, 분단 후 최초 만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7일 싱가포르에서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함.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골자로 한 ‘92공식’을 재확인하고, 핫라인 구축에 합의함. 시진핑 주석은 대만의 중국 주도 일대일로 사업 참여와 AIIB 가입을 환영하고 공동 역사책 발행을 제안했으며 마잉주 총통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함.
- 현재 중국-대만 양안관계는 매년 1000만 명의 인적교류, 200만 대만인의 대륙 상주, 30만 쌍이 넘는 중국-대만인의 결혼 등 교류협력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음. 한편으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체결되고 대만 GDP의 40%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등 경제협력도 심화되고 있는데, 대만 내에서는 민진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2014년 3월 대학생들이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시장을 개방하는 서비스 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면서 입법원(국회)과 행정원(행정부) 청사를 20일 이상 점거한 것은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음.
- 60여년 만에 양안 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 오늘날 활기찬 양안 간 교류와 경제협력에 비교되는 남북관계의 악화된 현실을 비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묻혀버림.

## ☞ 당의 입장 및 대응 :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 중국-대만 양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했지만,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회담장에 양국 국기도 내걸리지 않고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해 ‘선생’이라고만 호칭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아직 거리가 큼. 중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일 국가이며, 대만 독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에 비해 대만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으로의 통일을 주장하거나 민진당의 경우 아예 대만 독립과 양국론을 부르짖고 있음. 대륙과

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당의 경우에도 대만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음. 특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차기 총통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시절과는 달리, 양안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양안 관계는 대만의 정권교체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인적인 교류 협력은 꾸준히 전개되어 옴.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양호했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이후 정치-군사는 물론, 경제협력 및 인적·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과 비교가 됨.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북한은 체제의 안보에 아주 민감하고 우선시하는 특색이 있기는 함. 때문에 흡수통일(북한 용어로는 제도통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와 함께, 핵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가는 적극적 평화정책이 한반도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더불어, 설사 군사와 안보 부문에서 서로의 입장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와 인적인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전개하고 발전시켜 갈 필요를 오늘날의 양안 관계가 증명해주고 있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성사 여부, 방북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주목받을 것임. 설사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와 공식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이라는 국가와 그 지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징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나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의 성사, 나아가 박근혜-김정은 정상회담 추진과 성사 등은 우리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임. 정부나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이런 문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정권 재창출 등에도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반 총장의 방북이나 정상회담 등이 성사되면 그것 자체가 가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와 남북관계 회복과 진전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음.
- 다만 (당과 진보진영은)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대

통령과 정부도 북이 차가운 반응을 보인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대대적 경협 등 기존 제안의 되풀이만 하지 말고, 남북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려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이루어내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당장은 “첫째, 고위당국자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과 함께 거기서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선도해 갈 것, 둘째, 반기문 총장에게 대통령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정상회담 개최 등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능동적 모습을 보일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할 수 있을 것임.

## 4. 정치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여진 계속

### ○ 정기국회 의사일정

-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새정련의 국정교과서 관련 원내외 병행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국회 복귀.
-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까지 19일 남았음. 새누리당은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법 개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입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압박.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를 이용.
-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예산안 심의의 법정시한인 12월2일엔 예산안(정부원안)과 부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다.
- 때문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 처리 비협조를 문제 삼아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련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당하게 됨.
- 이 경우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증액을 노리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
- 11월 26일(목),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8일(화), 12월 9일(수) 본회의 개최 예정.

### ○ 선거구 확정 지연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이 11월 13일(금)을 넘겼음. 11월 10일(화)~12일(목) 3일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회담을 진행.
-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비례대표 절반 연동제와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새정련이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이 붕괴된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협상을 파기했음. 이후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유지할 것임. 다만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현행 공식 선거법 적용의 법적 시한이 2015년 말까지 이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15년 내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리될 전망.

### ○ 청와대와 새누리당, 좌우 이념 대결 구도 강화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매개로 한 야당들과 시민사회에 대한 이념 공세와 압박을 지속.
-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공안통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 고대영 KBS 사장 임명 등 인사 스타일의 요지부동,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영혼’ 운운 메세지 스타일,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 등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권력의 심리적 기저에는 자신의 불우한 생애사에 대한 보상심리, 아버지의 독재적 통치스타일에 대한 정치적 동화 심리, 반대파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심리가 뒤섞여 있음.
- 또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고, 총선까지 별다른 실책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우파 지지가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TK지역, 5060 세대를 자기 핵심 기반으로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반대파에 대한 이념 공세를 총선까지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끊임없이 활용할 것임.
- 이러한 이념대립 구도의 강화는 한편으로 정국을 대통령이 주도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새누리당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지향은 정당정치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해악이 되고 있음. 대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정당이 무력화 된다는 것은 정당이 대의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언론이 막힌다는 것임.
- 이는 정당정치를 식물정치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지배하는 폐쇄적 과두정치의 일상화로 그 폐해는 그대로 국민들의 삶과 생활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임.

## ○ 정의당

- 진보혁신회의는 참가 4 단위가 11월 22일(일) 국회에서 통합 당대회를 진행. 명실상부한 한국정치에서 진보정치의 재부상과 파급을 선언할 예정.

## ☞ 당의 입장과 대응

- 우여곡절 끝에 11월 22일(목) 진보혁신회의 4단위가 하나로 합치는 통합 당대회를 진행할 예정. 사실 분열보다 어려운 것이 통합임. 지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의 분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진보정당의 난립은 진보정치 자체를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임.
- 각 세력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 하나가 되기 위한 리더십과 프로그램, 정치력을 발휘하여 통합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5. 여론동향

### I. 해외 여론동향

#### ○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 ▶ 프랑스인 84%, 테러 방지 위해 검문검색 강화 찬성

-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인 IFOP가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8%가 테러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테러와 관련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84%로 집계되었음.
- 프랑스 좌파정부는 전통적으로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안전이 보장된다면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더라도 검문검색을 강화하는데 동의한 것. 이 같은 결과는, 테러에 대한 위협 수위는 도심이나 농촌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 이번 테러사태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87%가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된 군과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변하였고, IS 격퇴를 위한 프랑스군의 시리아 공습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IS 격퇴 위한 미국의 역할 강화 요구 여론 증가

-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로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이 IS 격퇴에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3%는 파리 테러와 같은 공격이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번 파리테러 사건으로 인한 테러의 공포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진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공습 강화에 대한 지지여론은 높았던 반면 특수부대 파견에 대해서는 65%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음. 특히 지상군 파견에 대한 반대여론은 76%로 압도적으로 높게 집계됨.
- 또한 미 국민 56%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파리 테러범 중 1명이 지난 10월 그리스를 통해 프랑스로 건너온 시리아 난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음.

## II. 국내 여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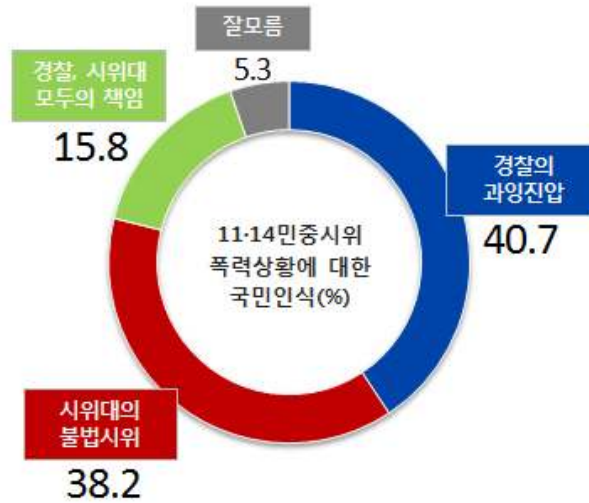
### ○ 테러 우려 집단으로는 북한보다 '이슬람국가'(IS)를 더 많이 지목

- 한국갤럽이 실시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묻는 조사(지난 17~19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결과,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남.
-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집단으로 응답자의 56%가 'IS 등 이슬람 테러 조직'을 지목했고, 14%는 '북한'을 지목함.
- 2001년 9월 미국 9·11 테러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내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9%였고,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북한을 지목한 응답이 60%인 반면 이슬람 조직을 꼽은 의견은 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현재 이슬람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
- 또한, 응답자의 61%가 우리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이 '별로 없다' 또는 '전혀 없다'는 의견이 '능력이 있다'(30%)는 의견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나, 국민이 정부의 테러 능력을 높게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에 군사공격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동참하는데 '찬성'의견이 64%로, 반대 의견(2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말 도심시위, 과잉진압 40.7%, 불법시위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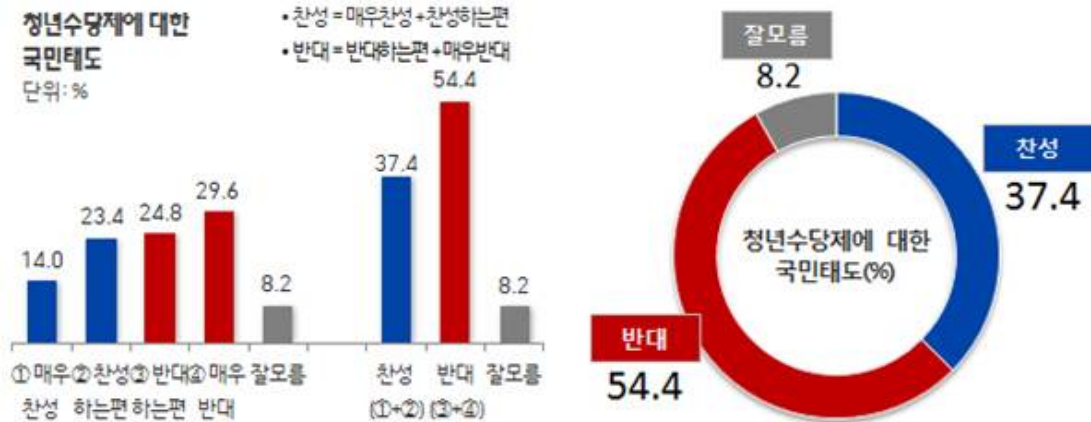
- 지난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17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4.4\%$ )한 결과, 과잉진압한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40.7%)과 시위대의 불법시위에 책임이 있다(38.2%)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남.
-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위대의 불법시위’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경찰의 과잉진압 61.3% vs 시위대의 불법시위 21.5%), 서울(46.5% vs 37.3%), 경기·인천(46.2% vs 33.1%)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남. 대구·경북(16.9% vs 57.8%)에서는 ‘시위대의 불법시위’라는 응답이 우세하였고, 부산·경남·울산(36.5% vs 43.2%)과 대전·충청·세종(34.8% vs 43.2%)에서도 ‘시위대의 불법시위’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경찰의 과잉진압 61.0% vs 시위대의 불법시위 9.0%), 30대(56.3% vs 23.5%), 40대(48.4% vs 32.1%)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17.6% vs 63.8%)과 50대(25.8% vs 55.4%)에서는 ‘시위대의 불법시위’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출처: 리얼미터

○ 지자체 청년수당제 추진, 찬성 37.4%, 반대 54.4%

- 국민 10명중 절반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청년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보조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제’ 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에서 ‘청년수당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11월 18일 조사, 응답률은 4.9%,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에서 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4.4%로 ‘찬성한다’는 의견(37.4%)보다 17.0%p 더 높게 나타남. ‘잘 모른다’는 응답은 8.2%를 기록함.



출처: 리얼미터

-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서울(찬성 35.3% vs 반대 61.7%), 부산·경남·울산(32.7% vs 60.8%), 대전·충청·세종(27.5% vs 56.9%), 경기·인천(39.5% vs 49.2%)에서는 반대가 대다수로 나타남. 광주·전라(45.9% vs 45.6%), 대구·경북(52.7% vs 45.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찬성 22.2% vs 반대 72.5%)와 60대 이상(23.5% vs 66.3%)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난 반면, 20대(53.2% vs 38.5%)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함. 30대(44.6% vs 47.6%)와 40대(46.8% vs 44.1%)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남.

○ 지자체 여론, 전북도민 61.7%, 현역의원 원치 않지만, 선거구 축소는 반대

- 코리아리서치에서 실시한 전북도민의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14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 결과, 내년 4월에 있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60%로 집계됨. 또한, 현역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도 응답자의 67%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이는 지역민들의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인 것이라 분석할 수 있음.
- 반면, 같은 조사에서 '선거구의 면적이 넓어지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선거구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1.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본다'는

22. 2%, 모름/무응답은 6. 5%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전북의 선거구 축소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선거구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19~29세(76. 4%)의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지역을 대표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5주 연속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1순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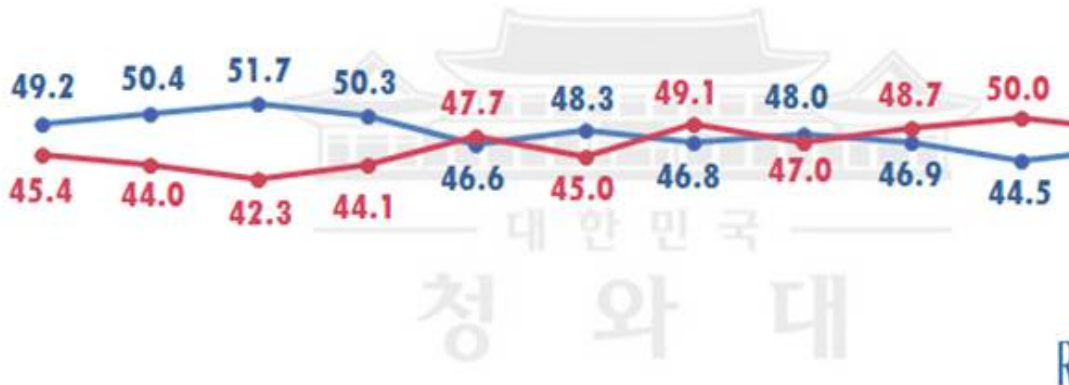
- 한국갤럽이 2015년 11월 둘째 주(10~12일 3일간) 전국 성인 1,01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0%는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함(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6%).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8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26%)(-4%포인트), '소통 미흡'(14%), '독선/독단적'(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경제 정책'(7%),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6%)(+3%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5주 연속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나타남.

###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5. 5%(▼0. 1p), 부정 48. 8%(▼0. 9p)

-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5년 11월 3주차 주중집계(16~18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 4%p)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1월 2주차 주간 집계(9~13일) 대비 0. 1%p 소폭 하락한 45. 5%(매우 잘함 18. 6%, 잘하는 편 26. 9%)로 나타남. 부정평가는 0. 9%p 하락한 48. 8%(매우 잘못함 32. 7%, 잘못하는 편 16. 1%)를 기록함.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5년 11월 2주차 단위: %

● 긍정평가 ● 부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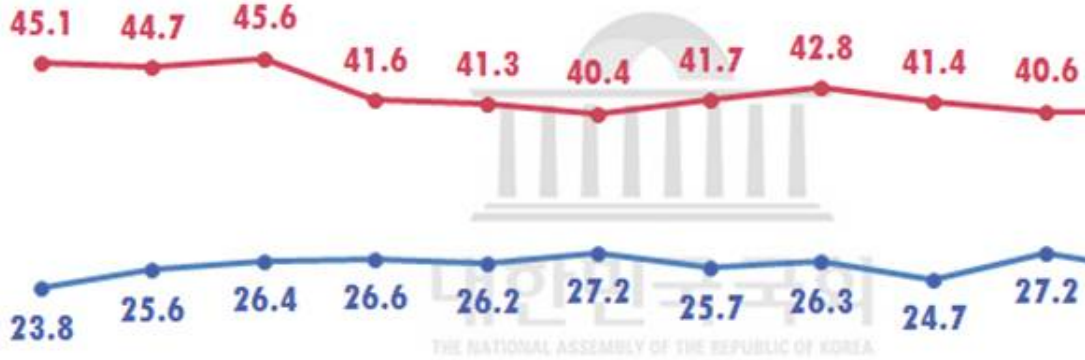
출처: 리얼미터

### ▶ 정당지지도

-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1월 3주차 주중집계(16~18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4%p) 결과,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와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정의당의 지지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은 42.2%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4%p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0.4%p 상승한 27.4%를 기록. 정의당은 0.5%p 하락한 4.7%를 기록함. 무당층은 2.2%p 감소한 22.2%를 기록하였음.

### 정당 지지도: '15년 11월 2주차 단위: %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출처: 리얼미터

R